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출산장려의 연계 및 해결 방안

문봉수(한·중 효문화연구소 소장)

목 차

- I. 서론
- II.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처한 환경
 - 1. 저출산·고령화, 효행의 공급과 수요 불일치
 - 2. 청년세대의 선택과 반격, 결혼 및 출산 기피
 - 3. 물질적 대책과 한계, 가치의 문제 대두
- III.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역할과 지향점
 - 1. 법률, 출산장려의 가치 기준이자 실천 기반
 - 2. 효와 효행, 가족과 생명의 윤리
 - 3. 출산장려 운동, 효 단체의 미래
- IV. 중국사례에서 찾는 저출산과 효행장려의 교훈
 - 1. 인구절벽 위기, 정책의 대전환
 - 2. 청년세대 대응, 혼인과 출산관 변화
 - 3. 효와 법률,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명령의 간극
- V. 결론

< 요약 >

효행장려법은 효행을 통한 고령사회 문제해결 차원에서 민간 효 단체의 선도, 입법부의 공감에 의해 탄생한 법률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다만 제정 후 15년의 시간이 경과한 만큼 사회 및 인식의 변화를 감안, 효 개념 재정립과 효행 교육 의무화 등 보완 입법이 요구된다. 나아가 동 법은 국가 현안인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의 가치 기준이자 실천 기반으로서 역할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청년세대의 결혼과 출산 기피가 심각한 가운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예산 투입도 중요하지만 당사자 심리를 자극하고 의지를 촉발키 위해서는 법에 규정된 교육 확대, 민간단체 지원 기능 강화를 통한 시민운동 활성화가 요구된다. 한편 우리와 유사한 입장의 이웃국가 중국은 국가 최고지도부 관심 속에서 '세 자녀 허용'으로 대표되는 인구 정책 대전환과 더불어 노인권익보장법 등 법률 개정과 정책 이행에 나서고 있지만 권위주의 국가 특성상 강제성의 문제를 드러낸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한 중국의 정책 가운데 우수한 것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상호 협력방안도 모색하되, 실패 또는 문제 사례는 타산지석으로 삼는 지혜를 발휘해야 될 것이다.

핵심어: 효행장려법, 저출산, 청년세대, 출산장려, 노인권익보장법

I. 서론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효행장려법)은 한국효단체총연합회, 한국효학회 같은 자생적 효 운동 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간사회의 선도적 준비와 노력, 입법부의 취지 공감에 의해 2007년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제1조에 적시된 것처럼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 하는 데 목적을 두었듯이 고령화 시대의 선제적 대응이기에 대단히 큰 의미를 갖는다. 그렇지만 15개 성상을 지나온 현 시점에서 입법 당시와 비교해볼 때 국민 의식과 사회 환경이 많이 바뀌었으며 권위 위주의 선언적 내용으로 인해 법 이행 측면으로는 유명무실한 부분도 목도된다.

효행장려법 제2조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히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는 문구에 대해 전문가 사이에서 기존 법에 명시된 효 개념이 자녀의 부모에 대한 순종, 복종의 의미만 담고 있어 달라진 현대사회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한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일부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¹⁾

고령화와 더불어 저출산 현상이 악화일로를 걷는 현재 상황 하에서 효 관련 단체 및 입법부는 시대의 소환과 요구에 응답, 효행장려법이 출산장려의 가치 기준이자 실천 토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 과정에서 효의 새로운 해석과 교육 차원에서 제2조를 ‘효란 부모와 자녀 간 사랑과 공경의 상호 호혜적 관계’로 재규정하고 제5조 ‘노력하여야 한다.’에서 ‘노력’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출산장려를 위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활동을 전개할 기구 설치 조문 추가도 검토의 대상이다.

아울러 법률의 실효성과 관련해 향후 효행의 주체, 출산의 당사자가 될 청년세대로부터 깊은 공감과 자발적 동의를 얻는 노력이 요구된다. 가정과 사회에서 효를 실천할 자녀의 의견이 배제된다면 법률로서 의미가 퇴색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예견하듯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최성규 총장은 입법 당시 한국효학회 회장 자격으로 “효행장려법은 효하는 자녀를 위한 법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를 잘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문화를 만드는 것을 주 내용을 하고 있다.”²⁾는 설명을 통해 법률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자녀의 입장을 십분 고려할 것을 주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저출산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현실 하에서 자녀세대의 인식과 행태, 정부의 대응 실태 등 효행장려법이 처한 현재의 환경을 점검해보겠다. 더불어 국가와 사회의 영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출산장려와 연계될 경우 법률로서 과연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방법과 방향을 모색토록 하겠다.

1) 효행장려법과 관련하여 황주홍 의원은 2018년 5월, ‘지방자치단체의 효행교육 의무화’를 명시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이명수 의원은 2019년 9월, 효를 사랑과 공경의 양 방향적 의미로 새롭게 정리한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2) 최성규, “간행사”, 『효학연구』 제4호 (한국효학회, 2007.8)

이어 이웃국가 중국 사례를 파악해볼 것이다. 세계 최대 인구대국으로서 그동안 인구 보너스를 향유했었으나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봉착해 우리와 유사한 고민 속에서 효행 진작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입법, 정책 수립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서는 만큼 유의미한 교훈 도출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II.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처한 환경

1. 저출산·고령화, 효행의 공급과 수요 불일치

우리사회에서 인구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등장하면서, 1년간 태어나는 신생아의 수보다 사망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인구의 자연감소를 의미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 그 뒤에는 ‘인구절벽’이라는 국가적 재앙이 기다린다. 우리로서는 이에 대비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정치, 경제는 물론 사회 모든 분야에 미칠 파급력이 큰 우려를 낳는다.

인구 감소는 사회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기이다. 당장 생산인구(15~64세)가 줄면 국가운영의 필수자원인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연금, 노동구조, 산업생산과 시장에 이르기까지 경제 전반에 걸쳐 도미노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사회적으로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초중고와 대학 등 교육기관은 폐교의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지역소멸이 현실화될 것이다. 안보의 경우 병역자원 부족으로 인해 상비군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지구상 유일의 분단국가인 입장임에도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까지 배제할 수 없다.

한 나라의 인구, 즉 국민은 영토·주권과 함께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 중 하나이다. 영토와 주권을 침탈당하면 국가로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듯이 국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더 이상 존립하기가 어렵다. 4차 산업의 부상과 더불어 인공지능(AI)이 인간의 판단과 수고를 대신하는 시대가 임박했어도 인구 감소에 따른 로마 멸망의 사례에서 보듯 “인구가 곧 국력”이라는 어제의 명제³⁾는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다. 인구가 많을수록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지고 내수를 진작할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인구는 경제발전에서 있어 필수불가결의 요소인 것이다.

아울러 경제력, 군사력 등 대부분 국력 지표가 인구와 밀접히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국가경쟁력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이와 관련하여 미 중앙정보국(CIA) 부국장을 지낸 레이 클라인(Ray Cline)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국력방정식을 만들었다. 그는 국력을 유형의 요소인 국토·인구(Critical mass), 경제력(E), 군사력(M)에다 무형의 요소인 국가 전략(Strategy), 국민의 의지(Will)를 곱한 값으로 측정했다. 동 방정식은 ‘국력=(C+E+M)×(S+W)’로 표기된다.⁴⁾ 국토뿐만 아니라 인구도 국력의 핵심적 유형 요소

3) 전성기에 구축된 영토 팽창→노예 공급→경제 성장→복지 강화의 운영 논리에 균열이 생기면서 작동이 정지된 게 로마가 멸망한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이 때 주목해야 할 건 인구 감소다. 출산 감소로 현역 인구가 줄면서 국가경제의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한 게 로마가 멸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이다. 전성수, 『대한민국 인구 트렌드 2022-2027』 (서울: 블랙피쉬, 2022), 32.

임을 알 수 있다.

2021년 12월에 발표된 통계청의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 담긴 각종 인구 지표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원래 예측보다 앞당겨져 2020년부터 자연감소로 돌아섰으며 2050년 4736만 명, 2070년 3766만 명까지 줄어 든다. 통계청은 현재 3738만 명인 생산인구가 50년 뒤에는 1737만 명으로 급감할 것이며 합계 출산율은 2024년 0.7명까지 떨어질 것⁵⁾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저출산을 경험했던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유례없는 수준이다.

출생아 수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는 2021년 처음으로 19만 2509건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9.8% 줄었다.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인식이 열리는 가치관에 더해 ‘코로나19’로 결혼을 미룬 사례까지 벌어지면서 혼인 건수가 크게 줄었다.⁶⁾ 이에 반해 고령층 증가세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예고하고 있을 만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는 상황이다. 고령인구 증가는 개인은 물론 사회의 부양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이와 같이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때문에 효의 관점에서 본다면 효행 대상인 부모세대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반면에 효행 주체인 자녀세대는 급속도로 감소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는 효에 대한 수요와 공급 간 상호 불일치로 인하여 앞으로는 가정에서는 물론 사회적, 국가적으로도 효행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때문에 효행장려법의 경우 현재 처한 환경이 결코 녹록하지는 않다. 그럼에도 역설적으로 저출산·고령화의 대책 마련 과정에서 예산 투입 등 물질적 접근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 ‘가치의 보루’로서 위상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청년세대 사이에서 “결혼하면 행복해지고, 아이를 낳는다면 더욱 행복해진다.”는 인식이 자리할 수 있도록 가족 기반의 효 기본 정신을 되살려야만 한다. 아울러 법에 규정된 것처럼 교육을 통한 효행장려에 노력하되 보다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상을 대학과 공공기관 등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⁷⁾

2. 청년세대의 선택과 반격, 결혼 및 출산 기피

2017년 방한한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대학생 간담회에서 한국을 ‘집단지살(collective suicide)사회’라고 해 파문이 일었다. 동 기금의 사상 첫 여성 총재였던 그녀는 “결혼 안 하고 출산율이 떨어지면 생산성과 성장률이 추락하고, 그러면 재정이 악화된다. 이러한 악순환 고리가 바로 집단적 자살

4) 이도형, “인구와 경제”, 경기일보(2022.3.14)

5) 통계청(<https://kostat.go.kr>) “2020~2070 장래인구 추계”(검색일 2022.5.1)

6) 원다연, “더 빨라진 인구 자연감소...출산여건 조성·정년연장 논의 속도 내야”, 이데일리(2022.2.23)

7) 효행장려법 제5조 1항이 규정하는 정규교육기관은 유치원, 초·중·고교로 한정되었다. 청년세대의 사회진출 직전 과정인 대학에서 최소 교양과목으로도 효행교육이 시행되어야만 당사자의 인식전환을 기대할 수 있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육 효과도 제고될 것이다.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교육을 강제하기 어렵지만,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과 단체 등 공공기관은 효행장려법의 ‘교육장려’ 적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

현상이다. 이게 한국의 문제”⁸⁾라고 일갈했다. 저출산에 대한 외부 인식이 당사자인 우리보다 더욱 심각함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이다.

이처럼 결혼 및 출산 기피 현상이 우리사회 현안으로 등장한 가운데 효행장려법이 향후 지속성, 유효성을 유지하면서 출산장려와 긴밀히 연계되려면 미래 효행의 주체인 청년세대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들이 효를 실천토록 장려, 지원하는 것이 법률의 취지이므로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파악해야만 입법 보완과 후속 조치 등 적절한 대책 마련이 가능하다.

오늘날 출산을 하락의 이유는 비교적 명확하다. 청년세대가 경제적인 여건 미비로 인해 쉽사리 결혼을 결심하지 못하고 가정을 꾸려도 아이를 가질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이들의 생계를 책임져줄 안정적 일자리가 부족하고 일자리를 잡더라도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기가 힘들다. 이른바 “영혼까지 끌어 모은다.”는 의미의 ‘영끌’로 겨우 내 집을 장만해도 아이까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현실에 직면하는 것이다. 취업시장의 살인적 경쟁, 성·학력 차별적 노동시장, 집값 폭등, 독박 육아 등 생활에서의 위협요인이 적지 않기 때문에 청년세대에게 있어 출산은 가성비가 매우 낮은 후순위 선택지에 불과하다.

이런 현상에 대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에 큰 부담을 느끼고 오히려 반려동물에 더 관심을 갖고 행복을 느낀다.”고 진단하면서 고령화·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민 문호를 적극적으로 개방할 것을 제언하기도 하였다.⁹⁾ 종교계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가톨릭의 프란치스코(Francis) 교황은 2022년 1월 바티칸 미사에서 저출산에 대해 “출산 않고 반려동물 키우는 건 이기적이고 인간성을 상실한 결정”이라는 쓴 소리에 이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면 입양도 고려해볼 것을 권유하였다.¹⁰⁾

베이비부머로 상징되는 과거 부모세대는 청년이 되면 고등교육내지 직업교육을 거쳐 경제 활황 하에서 취업 후 임금상승을 경험하며 저축을 통해 집을 마련하거나 자산을 늘릴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결혼과 출산 등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았다. 이에 반해 현재의 청년세대는 기술과 지식의 급속한 변화, 저성장 시대로의 진입, 평생직장 개념 소멸, 집값 폭등 같은 악조건 속에서 ‘불확실한 삶’을 살 수 밖에 없다. 이들은 연애, 결혼, 출산, 집, 경력, 인간관계, 희망, 건강, 외모까지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N포세대’가 되었다.¹¹⁾ 본인의 잘못도 없이 사회로부터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 “가장 많이 일하지만 가장 적게 버는 세대” 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던 이들의 피치 못할 선택이자 기존체제와 가치관에 대한 반격이 결혼 및 출산 기피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은 ‘저출산=출산파업’이라고 정의하였다. 아울러 “가임기와 육아기 여성들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2세대로 집에서

8) 김웅식, “인구위기와 저출산 해법”, 뉴스워치(2021. 12.17)

9) 박현수, “저출산·고령화는 가장 큰 위협...이민 적극 개방해야”, 문화일보(2022.4.27)

10) 이은택, “교황...아이 안 낳는 세대, 인간성 악화시켜”, 동아일보(2022.1.7)

11) 정소희, “솔로지옥에 열광한 N포세대”, 부산일보(2022.1.24)

평등하게 교육받고 자랐고 이들이 사회에서 자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데 결혼해 아이 낳아 키우면서 동시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좌절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 출산 파업 현상”¹²⁾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불경에서는 자식을 돌보는 부모의 다섯 가지 도리 가운데 하나로 일찍 결혼시켜 안정을 찾도록 돕는 것¹³⁾을 꼽았다. 맹자는 “불효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 대를 이어갈 자손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불효이다.”¹⁴⁾라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혼인과 출산, 종족 유지는 과거부터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중요 행위로 인식되었다. 그럼에도 우리사회에는 정반대 입장이 존재한다. 진보진영 일부 사회운동가는 저출산 우려를 비판하며 “횡행하는 종말론적 저출산 담론은 저들의 협박이자 헛소문이다. 노예가 아닌 삶을 위해 출산파업을 확장해야 된다.”¹⁵⁾는 주장을 편다. 그러나 출산파업 담론은 출산, 양육이 인간 행복의 근원이자 생물학적 의무이고 생명체의 본성임을 애써 외면한데서 나온 것이다. 인구상황 관련 정부통계 등 명확한 사실조차도 종말론적 시각으로 치부하는 행태는 결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물질적 대책과 한계, 가치의 문제 대두

1960년대에 들어서 본격화된 가족계획사업은 2000년대 초반 급격한 저출산 추세를 초래하며 우리사회에 ‘인구 부족’이라는 전대미문의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이에 따른 정부의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2005년에 이르러서야 국가 차원의 저출산 대응이 시작되었다. 이후 정부는 5년마다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다. 예산으로만 본다면 정부는 2006년 처음으로 저출산 예산을 편성하고 2020년까지 총 380조 2천억 원을 투입했다. 2006~2020년 간 출생아 수를 모두 합치면 626만 1467명이니까 단순히 나눠서 계산하면 아이 한 명을 낳을 때마다 6070여만 원씩 예산이 투입된 셈이다.¹⁶⁾ 이와 같은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2021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서, 이는 인구 유지선인 2.1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때문에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예산 투입을 놓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5년 이후 우리나라 인구정책은 막대한 예산 투입을 통한 저출산·고령화 속도 완화에 초점을 맞췄지만 출산율은 떨어졌고 고령화 속도는 둔화세를 보이지 않았다. 예산 효과를 놓고 감사원 감사까지 진행¹⁷⁾될 정도로 문제점이 제기되었음에도 정부는 2021~2025년 간 9조 5000억 원을 투입하는 ‘저출산극복 5대 패키지 과제’¹⁸⁾를 실행

12) 권현경, “저출산=출산파업, 파업을 끝내는 방법 뭘까?”, 베이비뉴스(2018.1.16)

13) 『佛說尸迦羅六方禮經』

14) 『孟子』 「離婁上」

15) 최현숙, “출산파업을 확장하자”, 한겨레신문(2018.4.22)

16) 김민재, “380조 저출산 예산...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요?”, 노컷뉴스(2021.9.21)

17) 감사원은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였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21.8월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18)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는 부부 공동 육아휴직제, 육아휴직 지원금(중소기업 최대 월 200만 원), 0~1세 영아 수당 월 30만 원 지급,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지급, 공공보육 확대를 지칭한다.

중이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구 위기에 대한 대중의 체감도이다. 대중의 관심이 멀어질수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¹⁹⁾ 따라서 인구 위기의 체감도를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

새로 출범한 현 정부는 “인구를 기반으로 제도와 정책, 사회시스템 전반을 점검하여 범정부적으로 필요한 변화나 수정 혹은 전면 재구조화를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미래에 대한 불안 및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구정책이 저출산 완화에 초점을 맞췄고 개인의 선택일 수 있는 영역에 국가가 자꾸 개입해 청년들의 반감을 불러왔다.”²⁰⁾는 자성론을 바탕으로 방식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인구정책 특성상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장기간에 걸친 예산 투입은 당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다. 그럼에도 출산장려는 물질과 함께 정신의 영역까지 고려해야 될 사안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에는 물질적인 지원만 존재할 뿐 출산과 관련된 국민인식 개선, 출산문화 진작 같은 방식의 대응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출산장려에는 기본적으로 물질적 측면 외에 정신적, 정서적 측면의 조치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저출산 현상에는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결혼연령의 상승 및 고령출산, 보육시설 부족, 주택마련 비용의 증가, 사교육비의 증가 등에서 보듯이 “아이를 낳아봐야 득이 없이 고생만 하고 노후불안으로까지 연결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그러나 저출산의 원인을 좀 더 들여다보면 출산과 직접 관련되는 젊은 부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부모 등 사회 기성세대의 가치관, 기업의 가족친화 및 출산친화적 문화정책 미비와 오너의 리더십, 정부정책과 공공의 리더십 부재 등도 자리하고 있다.

김종두는 그가 저술한 여러 문헌에서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은 ‘가치의 문제’로 접근하는 패러다임이 근본 대안이 되어야 하고 결국 효과 관련되어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어 청년세대의 결혼과 출산 기피라는 인류의 근본문제에 대한 해법 모색 과정에서는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어야 하는 바, 그 가운데 하나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인정되는 효를 교육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가족사랑을 기초로 이웃과 사회, 국가와 자연으로 확장하는 개념의 ‘광의적 효’를 교육한다면 국민들이 저출산 사태의 심각성을 근원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게 될 것²¹⁾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한양대 전영수 교수 논리에 의하면, ‘인구학=여성학’이라는 개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시대 변화에 조응할뿐더러 당위적이고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여성을 하대할수록 출산율은 낮아진다. 인구 반등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 하락세를 막은 스웨덴, 이탈리아, 스페인이 공동으로 전하는 교훈으로서, 이들 국가가 한국과 다른 점은 남녀 간 평등과 조화의 강화로 요약된다.²²⁾ 이처럼 저출산은 여성 존중 사고를 기반으로 풀어야 한다. 특히 부모와 자녀 간 사랑을 매개체로 하는 효를 통해 출산 당사자인

19) 전영수, 『한국이 소멸한다』 (서울: 비즈니스북스, 2018), 55.

20) 오수정, “인수위 尹정부 인구정책 전면 재구조화할 것”, 노컷뉴스(2022.5.1)

21) 김종두, 『효 패러다임의 현대적 해석』 (서울: 명문당, 2016), 68-69.

22) 전영수, 『대한민국 인구트렌드 2022-2027』 (서울: 블랙피쉬, 2022) 63.

여성의 불안심리를 이해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주는²³⁾ 등 발상의 전환이 출산장려 대책 마련에서 중요하다.

Ⅲ.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역할과 지향점

1. 법률, 출산장려의 가치 기준이자 실천 기반

대부분의 생물들은 종족보존의 양상을 보인다. 인간 역시 자기 후손이 공간적으로 확대되고 시간적으로 영속하기를 바라는 본능이 있다. 다산(多産)이 미덕이었던 과거 우리사회가 족보를 극히 중시하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대다수 가문이 많은 자녀를 통해 하나의 큰 가문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하였다. 이러한 욕망은 부모세대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 아직까지도 자식으로서 결혼하지 않는 것, 또는 아이를 가지지 않는 것은 불효로 간주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 부산대 조남욱 교수는 전통적 효의 가계 보전 기능을 논하며 후세 문제의 당사자로서 개인은 앞뒤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단독자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조상과 후손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로 인식되었다는 평가에 이어 자식을 낳는 데에는 선조로부터 가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한다는 생명 연속의 역사의식이 내재하고 있었다²⁴⁾고 설명한다. 이처럼 후세출산은 선천성에 기인하는 본능으로 이해된다.

행복의 내용이 담긴 불경에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잘 섬기고 배우자와 자녀들을 잘 보살피며, 번뇌에 구속되지 않는 평온한 일을 하는 것이 최상의 행복이다.”²⁵⁾라고 언급되어 있다. 이는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이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부모에 대한 효 실천, 혼인 및 출산을 통한 가정생활과 일상생활 영위에서 찾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정에서의 효도와 가족 보호, 사회에서의 직업 영위는 평범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서 본능에서 비롯된 우리의 삶이자 현실이다. 때문에 외부 간섭이나 방해 없이 국가와 사회에 의해, 법과 제도를 통해 온전히 보호되어야 한다.

1995년부터 “효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확신을 바탕으로 효 운동을 시작한 최성규 총장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효행장려법을 제의한 이유에 대해 “고령화 시대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와 자녀 간 효행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효행 장려를 규정하여, 효행을 권장하고 현대적 관점의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되살려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²⁶⁾라고 밝혔다. 이제 고령화 시대의 사회 문제로 등장한 저

23) 효 시스템은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에 대한 ‘사랑’이라는 매개체가 존재하기에 쌍무적 관계로서 출산에 관한 미래 불안을 안정화하는 심리기제이며 심리적 안전기제라고 명하고 있다. 출산이 고통일 것이라는 생각에 반해 출산은 행복을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의 변화는 가임기 여성이 처한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삶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서 자기결정에 달려있다. 즉 당면한 환경이 고통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과정이라는 관점으로서의 인식변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변환의 변곡점은 가족의 지지체계인 효 심리기제가 가장 유효한 기폭제 수단이므로 출산장려 정책에는 효행장려 정책 가운데 심리적 대안 적용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다. 차종목, “저출산 불안 안정화를 위한 효 심리 효과”, 『효행장려는 출산장려 FORUM』 자료집 (효문화지원본부, 2022.5.), 88-89.

24) 조남욱, “전통적 효와 현대적 효”, 『효학연구』 제10호 (한국효학회, 2009.12), 100.

25) 『吉祥經』

출산도 효행장려법을 통해 접근하는 지혜가 발휘될 시점이다.

효행장려법 제4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효행장려기본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르면 5년마다 수립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기관의 장, 즉 장관급 협의를 통해 수립하는 것인 만큼 정부 내 범부처 차원에서 다뤄지는 위상을 갖는다. 이는 효행장려법이 원래 취지인 고령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 과정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용』에서는 “무릇 효라는 것은 선인의 뜻을 잘 계승하며 세상에 그 뜻을 잘 펼치는 것이다.”²⁷⁾라며 부모의 희망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공적인 분야에서 구현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기성세대의 전통적 입장에서 해석하자면 자식이 부모 희망을 수렴하고 구현한다는 것은 적령기에 맞춘 결혼과 출산, 그리고 취업이다. 즉 일자리를 구하고 결혼해 아이를 낳는 것이 바로 효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이를 강제하기 어렵고 출산을 권유하는 데 있어서도 바로 적용하기에는 것에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효행장려법이 이제는 보다 전향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동 법은 우리가 ‘백행의 근본’이라 여기는 효의 가치를 수호하고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서 진정성과 입법 당시 초심에 맞도록 향후 고령화를 넘어 저출산 문제 대응과정에서 새로운 해석자로서 역할 모색이 중요하다. 부모와 자녀 공히 동감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효행은 대상자만을 위한 것도, 주체만을 위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조문에 ‘효행은 공동체 성원 모두를 위한 사회적 가치구현이며 출산장려는 효행의 나아갈 방향’임을 명시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동 법 제5조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는 저출산 극복의 가장 확고한 법적 근거이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부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토록 노력할 것을 규정했기 때문이다. 교육 내용에 출산장려가 담긴다면 조기교육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군부대 교육은 청년층 다수를 대상으로 상시 실시되므로 파급효과가 크다. 다만 사회생활 직전 단계인 대학이 제외된 것은 핵심 대상을 도외시하는 결과가 예상되므로 대상에 포함시키고, ‘실시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도 의무화 차원에서 ‘실시해야 한다.’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2. 효와 효행, 가족과 생명의 윤리

성경은 “하느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²⁸⁾라며 인류의 행복을 위해 출산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가톨릭의 경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1995년 반포한 회칙 39항에는 ‘인간생명은 하느님

26) 최성규, 『우리가 꿈꾸는 하모니 세상』 (인천: 성산서원, 2017), 62.

27) 『中庸』 “夫孝者, 善繼人之志, 善述人之事者也.”

28) 『성경』 창세기 1:28.

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하느님의 선물이며, 그분의 모상이고 각인이며 그분 생명의 숨결을 나누어 주신 것이므로 항상 선한 것이다.’라고 나와 있다. 자녀를 하느님의 선물로 보고 출산은 부모의 고유한 권리라고 가르치는 것이다.²⁹⁾

한편, 모든 생명 속에 부처가 있음을 설파하는 불교에서는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사람에게 병이 많고 제 명대로 살지 못하는 까닭은 유산(流産)이 그 근본 원인이라. 세상 살며 지은 죄업 중 뉘우쳐도 쉬 씻기 어려운 다섯 가지 죄는 아버지를 죽인 죄, 어머니를 죽인 죄, 태아를 죽인 죄, 부처 몸에 피를 낸 죄, 대중의 화합을 깨뜨린 죄”³⁰⁾라고 열거하였다. 이는 태아를 죽인 죄의 위중함을 환기시키며 태아는 부모님과 부처에 비견될 정도로 지고한 존재임을 역설한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인터넷커뮤니티 등 사회 일각에서 반출생주의(反出生主義, Anti-natalism)가 서서히 대두되고 있다. 아직 주류는 아니지만, 국가와 사회의 영속성에 역행하는 사조로서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전파되고 이들의 인식 체계에 스며들 경우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반출생주의는 말 그대로 사람이 세상에 나오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철학으로 비록 부모라고 해도 자식을 영문도 모르는 채 세상에 나오게 할 권한이 없다는 식의 주장을 펼친다.

이러한 주장을 체계적으로 논증한 남아공화국 케이프타운대학 데이비드 베너타(David Benatar) 교수는 “아이를 가짐으로써 새로운 사람들을 창조하는 것은 인간 삶의 너무나 거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정당화를 요구한다는 생각조차 거의 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통해 출산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선한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들이 고통을 겪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서도 아이들의 모든 고통을 예방하는 하나의, 그리고 유일한 보장된 방법은 아이들을 애초에 존재하게끔 하지 않는 것”³¹⁾이라며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놓고 극단적인 강도의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에 대한 관련 학계의 대응논리 개발이 긴요하다.

2019년 저서가 국내에 번역, 소개되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그의 주장은 우리 정서로는 쉽사리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역설적으로 많은 사유를 촉발시킨다. 우선 “낳음 당했다.”는 목소리가 우리 사회 일각에서 나오고 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서 능력 없는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자조이자 한탄이다. 신성한 출생의 의미가 완전히 퇴색되었음을 희화화한 현상으로서 청소년층의 건전한 미래를 위해 학교 교육에서 충실한 논리에 기반한 이성적 설득이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미덕이자 자산이라 할 수 있는 효와 효행을 ‘출산장려 논의’의 장에 본격적으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효를 ‘생명의 문제’로 접근한 대만 성공대학교 차이우송(蔡茂松)교수 논리에 따르면 효는 생명철학이다. 그는 효의 본질을 세 가

29) 저출산고령화대책시민연대 공동포럼, “종교계 저출산 문제 어떻게 보나”, 연합뉴스(2006.2.21)

30)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31) David Banatar, BETTER NEVER TO HAVE BEEN: THE HARM OF COMING INTO EXISTENCE 이한 역,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서울: 서광사, 2019), 18, 24.

지로 논하였다. 첫째는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부모의 생명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 형제의 생명, 친척의 생명, 나아가 인류와 만물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는 생명의 건전과 연속성을 유지토록 하는 것이다. 셋째는 생명을 존경하는 것이며 부모의 생명 내지 남의 생명을 존경하는 순결의 행위인 것이다.³²⁾

생명의 탄생이 예비되는 단위는 가정이다. 이제는 비혼 출산도 낫선 일이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결혼을 통해 만들어지는 가정이야말로 출산과 양육의 바탕인 것이다.³³⁾ 성경은 “여호아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사람의 독저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³⁴⁾라며 가족과 가정의 필요성을 설파 한다.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예부터 부부로 맺어지는 관계를 천생연분(天生緣分), 부모와 자녀 관계를 천륜(天倫)이라고 부르며 하늘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여겨왔다. 그러므로 효행장려법을 출산장려와 연계시키는 작업의 일환으로 제1조 목적에 ‘이 법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이자 가정윤리, 생명윤리인 효를 국가 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라는 문구가 첨가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3. 출산장려 운동, 효 단체의 미래

남에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라고 조언하는 행위가 가진 무게를 의식한다면 출산장려 운동은 결코 가벼운 일도, 쉬운 일도 아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접근 방법이나 방식에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 그러나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만 될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종교계가 선도적 역할을 자임한 것은 출산장려에 있어 든든한 배경이자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3대 종교는 이미 2005년 6월 ‘저출산고령화대책시민연대’를 설립하고 국가 기본 틀을 흔드는 저출산의 재앙적 상황을 극복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 단체는 설립 취지문에서 “정부의 고령화대책이나 출산장려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정부가 실행해왔던 근시안적 인구 억제 정책은 생명윤리를 무너뜨렸고,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산 국가로 진입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진단하였다. 이어 “아이 갖기를 싫어하는 풍토가 현대사회의 특성과 관련 있다면 이는 제도적 접근뿐만 아니라 문화적 접근까지 수반되어야 한다. 이제 출산장려 운동은 시민운동을 통해 사회 전반의 가치관 변화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 자녀들과 함께 사는 가정의 행복을 알리고, 건강한 가족의 모델을 발굴제시하며, 결혼 전 자녀출산을 통한 행복한 가정설계를 갖도록 해야 하며, 건강한 가정문화 운동을 통해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사회의 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³⁵⁾

32) 蔡茂松, “효의 본질과 현대적 의의” 『효사상과 미래사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176.

33) 가정의 첫 번째 기능은 출산과 양육기능이다. 출산은 자식을 낳아 종족을 보존하는 기능이다. 인간의 종족 보존 본능은 가정을 이루는 근원적인 힘이다. 그것을 지혜롭게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인류는 결혼이란 제도를 창안해 냈고 그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마련된 가정은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꾸려나가는 가장 작은 사회를 만들었다. 김종두, 『인성교육의 이해와 실제』 (서울: 명문당, 2018), 292 참조.

34) 『성경』 창세기 2:18.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시민운동의 전개이다. 저출산과 관련하여 정부 대책과 지원은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나 출산 장려는 개인의 가치관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에 민간 차원에서 이뤄져야 강제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실효성을 갖는다. 저출산은 효행장려법 제1조에 적시된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의 하나이다. 이러한 문제가 효행을 통해 해결되려면 동 법 제1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시민, 사회단체, 학계 등 민간분야의 활발한 참여 유도가 가능해진다. 특히 전국 효 관련 단체 소속으로서 일정 자격을 갖춘 효지도사를 재교육시킨 후 출산장려 교육 일선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³⁶⁾

출산장려 운동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청년세대의 심리를 자극하고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노력이다. 출산에 대한 의지가 강한 청년세대는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출산지원금을 주지 않아도, 양육비가 과중하다고 해도 개의치 않고 아이와의 관계에서 행복을 찾는다. 즉 우리사회 현안인 저출산 해법은 당사자의 마음을 움직여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삶의 보람이며 의미라고 느끼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효생활화시민운동을 이어온 효문화지원본부 신석산 대표는 결혼한 젊은 부부의 출산의지 확신은 ‘효 마음’에서만 시작될 수 있다면서, “효 마음이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 느끼게 되는 자신에 대한 확신감”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자신이 부모님으로부터 세상에 태어났다는 그 고마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시점³⁷⁾”이라고 강조한다. 자신에 대한 확신감은 조상과 후손을 연결하는 중개자로서 위대하고 존엄한 존재라는 자아 긍정에서 비롯된다. 이는 출산장려 운동 추진 시 청년세대 정체성 파악이라는 차원에서 주안점을 둬는 물론 교육 콘텐츠에도 적극 반영해야 될 부분이다.

효행장려법 제8조는 효문화진흥원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연구와 교육, 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 효 단체 지원 등 효 문화 진흥에 관련된 다양한 업무가 포함된다. 그러나 아무래도 정적인 측면의 이론 위주 업무라 현장 활동, 대면 운동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 출산장려에 필요한 것은 이론을 기본으로 하되 사회현장에서 이뤄지는 운동이다. 따라서 동 법에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출산장려 운동을 전개할 기구 설립이 적시되어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운동의 중요성을 감안, 민관합동 성격의 기구로 자리하는 것이다. 효는 출산장려정책의 철학적 기초라고 성격 짓는 김종두의 견해를 빌리자면 “출산장려정책은 효 가치, 효 문화, 효 교육을 패키지로 하여 큰 틀에서

35) 정운석, “저출산·초고령화 문제 종교가 푼다”, 기독교포털뉴스(2005.7.4)

36) 효의 본질과 현대적 효 의식을 공부하고 실천해오고 있는 전국의 효 관련 단체 혹은 기관이 수백 여 곳이 된다. 여기에 소속된 자격 있는 효지도사들로 하여금 효 심화교육과 출산장려 교육을 받게 하여 단계적으로 언론 및 기업체 직원 교육과 국민계몽을, 장기적으로 효행장려법에서 규정한 각급 교육기관 등에서 교양교육 차원으로 실시하면 실정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김시우, “효를 통한 저출산 위기 극복 방안”, 『효행장려는 출산장려 FORUM』 자료집(효문화지원본부, 2022.5), 54.

37) 신석산, “효행장려는 출산장려” 『효행장려는 출산장려 FORUM』 자료집(효문화지원본부, 2022.5), 17.

추진해야 하는 것”³⁸⁾이기 때문이다.

효 단체는 그간 고령화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효행장려법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이자 향후 활동의 중요한 토대이다.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이 심각해진 지금의 상황은 효 단체를 불러들여 출산장려의 최선두에서 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후대가 없는 사회는 효행이 불가능한 사회인만큼 효 단체의 미래는 저출산 극복에 맞춰져야 한다.

IV. 중국사례에서 찾는 저출산과 효행장려의 교훈

1. 인구절벽 위기, 정책의 대전환

중국인민군은 한국전쟁 당시 연인원 300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투입해 인해전술을 사용했을 정도로 인구 측면에서 수적인 압도감을 보여주는 나라이다. 이 전쟁에서 자국군 공식 전사자가 18만 명에 달했음에도 태연자약했던 마오쩌둥(毛澤東)은 “사람이 많으면 역량이 커진다(人多力量大)”라는 이론을 펴기도 했다. 그만큼 과거 중국에서는 많은 인구가 대외적으로 국가의 자랑이자 전쟁 수행에 있어 매우 강력한 경쟁력이었다. 개혁개방 이후 빈곤을 벗어나며 ‘세계의 공장’으로서 연 평균 8%에 달하는 고도 경제 성장을 기록한 배경에는 인구보너스가 자리한다.

중국의 인구는 1949년 5억 명에서 1964년 7억 명, 1974년 9억 명으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개혁개방의 총설계사 덩샤오핑(鄧小平)은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부족과 경제성장 지체를 염려해 집권 초기인 1980년 “소수 민족을 제외한 모든 가정에서는 한 명의 자녀만 낳으라.”고 지시하였다. 이를 어기면 연평균 소득의 10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젊은 부부의 경우 강제적으로 유산도 장려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 4억 이상 출산이 억제된 것으로 추정된다.³⁹⁾

최고지도자 지시 한 마디에 강력히 진행된 ‘계획생육(計劃生育)’이라는 명칭의 산아제한 조치는 부작용도 컸다. 친가와 외가의 조부모 4명과 부모 2명, 아이 1명으로 이뤄진 ‘4-2-1’ 가족구조가 고착화되며 경제성장의 주역인 젊은 세대가 너무나 많은 피부양자를 떠안는 상황이 벌어졌다. 여기에 더해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신생여아 살해, 규제를 피하기 위해 둘째 이후 자녀를 호적에 올리지 않는 헤이하이즈(黑孩子)⁴⁰⁾등도 큰 문제가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2015년부터는 생산인구마저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고심하던 중국정부는 그간 견고히 유지해왔던 산아제한 조치를 완화하면서 2015년에 두 자녀까지 허용했지만 출산율은 기대처럼 늘지 않았다. 결국 공산당 핵심인 정

38) 김종두, “효는 출산장려정책의 철학적 기초다” 『효도 복지』 (한국효단체총연합회 www.hyouunion.com/post/458?gid=3/5, 2022.5)

39) 류지영, “중국도 백약이 무효...출생율 43년만에 최저”, 서울신문(2022.1.5)

40) 헤이하이즈는 산아제한 정책을 피하기 위해 호적에 올리지 못한 아이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정책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이 서민 가정의 1년 치 생활비에 달한 정도로 큰 금액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농촌에서 이런 아이들이 많았다.

치국은 인구절벽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판단 하에 2021년 5월 31일, 시진핑(習近平) 주석 주재 하에 ‘가족계획 정책 개선과 장기적 인구 균형 발전에 관한 결정’을 심의하고 ‘세 자녀 허용’ 정책을 결정하기에 이른다. 동 결정은 2025년까지 출산율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가의 영속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출산 지원에 나서고 출산율을 높여야 되는 중국의 현실과 최고지도부 고심이 반영된 정책의 대전환이었다. 이와 함께 아동 양육의 장애요인이었던 교육비 부담 해소 차원에서 ‘사교육 전면 중지’도 시행되었다. 미 나스닥(NASDAQ) 상장의 업적을 이뤘던 자국 교육 전문 기업의 존망 문제는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었다.⁴¹⁾

다만, 동 결정의 일부 내용은 독소조항으로 지적된다. 인구 문제에도 당과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예고되었기 때문이다. 인구 모니터링 조항에 ‘국가 생명 등기 관리 제도를 완비해 모든 군중과 생명주기를 커버하는 인구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 출산 상황과 인구 변동 추세를 세밀히 관측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가 인구 기초 데이터베이스 등 플랫폼에 기반해 교육, 치안, 행정, 위생건강, 의료보장, 사회보장 등 인구 서비스 기초 데이터를 융합하고 공유, 업데이트하는 등 인구의 장기 균형 발전 지표 시스템과 건전한 인구 예측 및 경보 제도를 건립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요람부터 무덤까지 인구 관련 모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밀착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⁴²⁾

당 정치국 결정을 구현키 위해 3개월 만에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통과시킨 「인구 및 가족계획법」개정안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누구나 셋째아이까지 낳을 수 있게 되었다. 이른바 ‘사회부담금’ 명목으로 부과된 미이행 벌금 폐지 등 그동안 출산율 저하의 요소였던 조치가 역방향으로 급선회하였다. 최고지도부의 강력한 의지가 실린 동 개정안에는 정부 차원에서 재정, 세금, 보험, 주택, 고용 관련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국민의 출산, 양육, 교육 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었다. 또한 의료보건기구가 출산 연령기 사람들에게 건강한 출산과 양육에 관련된 교육과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 여성이 직장에서 받는 차별대우를 줄이고 공공 어린이집 수는 늘이며 육아휴직을 국가차원에서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⁴³⁾

이외에도 우리가 눈여겨 볼만한 중국정부 프로젝트가 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100개 아동친화도시 건설 시범사업’ 추진이다.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부녀아동업무위원회, 민정부 등 23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2021년 10월 15일 아동친화도시 건설추진에 관한 지도 의견’을 발표하였다. 동 의견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에서 100개에 달하는 아동친화도시 건설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친화적 개념이 뿌리내리게 하고 사회정책, 공공서비스, 권리보장, 성장공간, 발전환경 등 분야에서 아동을 위한 각종 시설과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41) 2006년 중국기업 최초로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었던 교육기업 신동방(新東方)은 중국인 특유의 교육열에 힘 입어 성공신화를 쓰면서 신경제의 총아로 부상했다. 그러나 사교육 폐단의 원흉이자 저출산을 가져온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면서 당국의 ‘사교육 전면 금지’라는 철퇴를 맞았다. 2021년 하반기 10만 5200 명의 직원 가운데 6만 명을 해고했으며 증시에서 시가 총액은 90% 감소할 정도로 타격을 받았다.

42) 신경진, “14억 중국의 저출산 대책...셋째 벌금 없애고 교육·주택 지원”, 중앙일보(2021.7.21)

43) 장영은, “중국 세자녀 출산 허용...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 이데일리(2021.8.22)

또한 2035년에는 인구 100만 명을 상회하는 전국 도시 가운데 50% 이상의 도시를 아동친화도시로 건설할 것으로 알려졌다.⁴⁴⁾

2. 청년세대 대응, 혼인과 출산관 변화

사서삼경의 하나로서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춘추시대의 민요 모음집인 『시경』에는 ‘종사’라는 제목으로 “메뚜기 날개 소리 많고 많으니 네 자손의 번성함이 마땅하리로다. 메뚜기 날개 소리 웅웅하니 네 자손이 계속 이어짐이 마땅하리로다. 메뚜기 날개 소리 모두 모여드니 네 자손의 번다함이 마땅하리로다.”⁴⁵⁾라는 시가 실려 있다. 가을 수확기에 온 들판을 뒤덮는 메뚜기처럼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자손을 낳아서 행복한 삶을 구가하라는 축복의 노래인 것이다. 여기에서 전통적으로 자손 번성을 기원하는 중국인의 심리를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1970년대 이전만 해도 대다수 중국인은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더 행복하다.”는 생각을 가졌다. 노후보장 체계가 전무한 실정이므로 자녀가 많으면 노후가 든든해지고 시골벽적인 분위기 속에서 형제애가 싹트며 가정이 화목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재는 상황이 바뀌었다. 절대 권력자인 시진핑 주석이 아무리 가정과 가정교육, 가풍의 중요성을 강조⁴⁶⁾한다 해도 산하제한 정책에 의한 ‘한 자녀 시대’에 태어난 청년세대는 결혼, 출산, 가정에 대한 인식이 부모세대와 확연히 다르다. 아울러 외동자녀로서 과보호를 받은 결과로 인해 자신이 부모의 노후를 위해 보호자 역할을 하겠다는 정신적 의지도 박약하다.

2021년 전반기부터 중국 청년층 사이에서는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탕핑(躺平)’이라는 유행어가 회자되었다. 1980년대 초반~1990년대 출생 밀레니얼 세대와 2000년대 출생 Z세대를 통칭하는 MZ세대가 말 그대로 “평평하게 드러누워 살자.”는 의미로서 “집 사지 말고, 차 사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아이 낳지 않고, 소비하지 않는다. 최저 생계 기준만 유지한다. 타인의 돈 벌이를 위한 기계나 착취당하는 노예가 되기를 거부한다.”는 식의 움직임을 보였다.

과거 천안문 사태의 쓰라린 기억을 가진 당과 정부는 청년들의 행동이 아직까지는 소극적인 저항 수준이지만 자칫 기존체제 반대, 정권에 대한 불복종으로 번질 것을 우려해 탕핑토론방을 폐쇄하고 SNS 우선 검색어에서 ‘탕핑’을 금지시켰다. 청년세대가 결혼과 출산, 소비 등 정상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거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가 존망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이다. 미래의 주역이 되어야 할 이들은 왜 사회 통념

4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s://csf.kiep.go.kr>), “中 100개 아동친화도시 시범사업 전개” (검색일 2022.5.10.)

45) 『詩經』「周南」, “蠡斯羽, 詵詵兮, 宜爾子孫, 振振兮. 蠡斯羽, 薿薿兮, 宜爾子孫, 繩繩兮. 蠡斯羽, 揖揖兮, 宜爾子孫, 螻螻兮.”

46) 시진핑은 2016년 12월 12일 ‘제1회 문명가정’으로 선정된 대표단 접견 시 “가정의 안정과 화목은 사회의 안정과 화목으로 연결된다. 국가의 부강, 민족의 부흥, 국민의 행복은 최종적으로 행복이 가득 찬 가정에서 구현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가정은 제1의 교실이고 부모는 아이의 첫 번째 선생님으로서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각 가정마다 좋은 가풍을 만들어 사회 전체의 좋은 기풍이 유지되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상세한 내용은 習近平, 『習近平談治國理政 第二卷』(北京: 外文出版社, 2017), 353-354 참조.

에 반하는 선택을 했는지 살펴보겠다.

오늘의 중국 청년세대는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파생시킨 개발우선주의, 금전만능과 출세지상주의 사회에서 태어나 취학 연령에 진입한 직후부터 대학입시, 취업에 이르기까지 치열한 경쟁에 내몰려왔다. 취업에 성공했어도 끝이 아니다. IT분야의 경우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독점적 플랫폼기업⁴⁷⁾을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고 그에 따른 경쟁이 가열되면서 고학력 청년층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다. 이들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 6일을 근무하는 ‘996 근무시스템’에 적응해야 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번아웃 증후군(burnout syndrome)을 겪게 되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세상을 대하는 것이다.

라이더(Rider)로 상징되는 도시 노동자 상황도 심각하다. 1인 가구와 재택근무 증가와 더불어 도시 골목을 두고 업체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배달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배달 시간을 맞추면 인공지능 시스템은 시간을 또 다시 단축해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업체들은 청년들을 향해 ‘자유롭고 임금도 높은 일자리’라고 광고한다. 불경기와 코로나 19로 실직한 노동자들, 대학 졸업 뒤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들도 배달노동에 뛰어 들었다. 업계 선두인 메이탄(美團)은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석사학위 소지자 6만 명, 대졸자 17만 명 이상이 이 회사 배달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⁴⁸⁾ 청년세대로서는 결혼과 출산이 사치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덩샤오핑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부자가 되게 하라.”는 선부론(先富論)으로 중국을 깨우고 자극한 이래 물질우선, 금전만능 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사회는 전반적으로 철학의 빈곤에 직면하였다. 여기에 더해 공산당 일당독재의 성격상 사회현안 해결을 놓고 학계와 단체, 언론 등 민간의 참여 범위와 발휘 역량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때문에 청년세대를 보듬고 이끌어줄 정신의 존재는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세 자녀 허용’ 등 국가정책이 좋은 취지에서 출발했어도 적용 대상인 당사자의 참여와 동의 없이 진행된다면 소통과 개념 부재의 탁상공론으로 평가받음은 물론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불가능해진다. 결국 저출산 극복과 관련된 철학 부재와 일방적 대책의 한계를 놓고 당과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3. 효와 법률,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명령의 간극

중국인민대학 한광중(韓廣忠) 교수는 민간단체의 자발적, 선도적 효 운동을 거치면서 제정된 우리의 효행장려법에 주목하였다. 그는 한국사회에서 진행되었던 효 운동과 입법에 대한 평가를 통해 현대사회 효 문제를 비교적 일찍 깨닫고 선양홍보한 것으로서 도덕과 법률을 함께 다룬 방식은 효과적인 경로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리

47) 바이두(百度), 알리바바(阿里巴巴), 텐센트(騰訊)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국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각각 검색 포털, 전자상거래, 메신저 등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거쳐 독점적 위상을 확보한데 이어 가입자 수를 기반으로 다양한 영역까지 문어발식 확장경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고객 데이터 독점’에 따른 민간 위상의 제고와 체제위협 가능성을 우려한 중국 공산당 및 정부에서 강력한 규제와 견제에 나섰는 바, 마윈(馬雲) 등 창업자 견제와 퇴출이 구체화되었다.

48) 박민희, 『중국 딜레마』 (서울: 한겨레출판, 2021), 182-183.

고 효의 보급과 입법 과정에 민간 역량이 적극 참여한 것은 중국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⁴⁹⁾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는 당과 정부 주도의 중국에서는 결코 상상키 어려운 민간 주도의 입법운동이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중국에도 일명 ‘효도법’으로 불리는 「노인권익보장법」(老年人權益保障法)이 존재한다. 물질과 정신, 두 가지 측면에서 빈곤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노인들을 위해 장쩌민(江澤民) 집권기인 1996년 제정되었으나 ‘부모공경과 노인복지 증진’이라는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의미에만 머물렀다. 진일보한 조치 없이 2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고 시진핑 집권 2년차인 2013년 7월, 중국은 자녀의무 불이행에 따른 법적 제재를 담은 개정 법률안을 발표하였다. 동 법은 우리처럼 민간 효 단체 차원에서 논의된 것도, 추동력을 발휘한 것도 아니다. 효 정신의 부재에 따른 각종 사회병리 현상에 대응키 위해 나온 당과 정부의 교육지책이다.

동 법은 ‘60세가 넘은 부모에 대해서는 자식이 정신적, 경제적 지원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 조문을 보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자식들은 정기적으로 부모를 방문해야 되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매달 부모에게 용돈을 드려야 한다. 부모 봉양을 피하고자 고의적으로 유산상속권을 포기하는 것도 금지됐다. 아울러 이 법에는 ‘직장 때문에 부모와 멀리 떨어져 사는 직원에게는 고용주가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⁵⁰⁾는 내용도 담겼다. 법의 발효 이후 각급 법원에서 경제적 지원 문제로 인해 자녀와 다툼이 있는 부모의 입장을 십분 고려한 판결이 나오고 있다.

오늘날 중국인의 가치관은 과거와 확연히 다르고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있어 국가에 의해 효도가 강제되는 문제를 놓고 분명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존재한다. 동 법 개정 전까지는 부모에 대한 효도가 ‘도덕에 기반한 개인적 가치’였지만 개정 이후에는 ‘법에 기반한 사회적 명령’이 되었다. 이 때문에 적용 대상자인 중국의 2030세대가 불만을 표출하는데, 불만의 주요 원인은 국가에서 젊은 층에게 부모와 노인세대 부양의 의무를 떠넘긴다고 인식하는데 있다.⁵¹⁾ 개정된 법이 명확한 시행세칙조차 없이 개개인의 일상생활에 관여하고 효를 강제한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권력에 의한 효도의 강권 문제를 놓고 거론되는 것이 또 있다. 바로 사회신용시스템(社會信用體系)이다. 중국정부가 ‘신용사회 건설’을 명분으로 2014년부터 본격 추진했던 이 시스템은 일상을 토대로 매긴 국민 개개인의 신용점수에 따라 사회,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대중교통 부정승차, 무단횡단, 세금 체납 등 법과 규정 위반 외에도 부모 봉양, 외국물품 구매 등 극히 개인적인 행동마저 점수화시킨다.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효도 여부까지 들여다보는 것이다.

지방정부 가운데 장쑤성(江蘇省) 산하 지방도시는 정부 정책의 본격 추진 이전인 2010년부터 ‘대중 신용 관리를 위한 실험조치’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14세 이상의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점수평가 조치를 시행하였다. 세부내용을 보면 ‘은행용자 연체 기

49) 韓廣忠, “韓國社會孝道推廣運動及其立法實踐述評”, 『효학연구』제9호 (한국효학회, 2009.4), 32.

50) 내용 全文은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 「中華人民共和國老年人權益保障法」 원문 본 참조.

51) 문봉수, 『시진핑의 효도 리더십』 (서울: 북랩, 2021), 137.

록이 없으면 플러스 50점, 연체 2회 이상이면 마이너스 50점, ‘사회보험을 성실히 납부하면 플러스 35점, 고의로 납부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20점’, ‘사이비종교 활동에 참여한 기록이 없으면 플러스 50점, 있으면 마이너스 50점’, ‘노인 부양 의무를 방기하지 않았으면 플러스 50점, 방기했으면 마이너스 50점’ 등이다.⁵²⁾

효는 공공의 도덕률이자 개인의 가치관이다. 따라서 사회가 설정한 이행 당위성과 개인의 이행 가능성 간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정부가 법과 정책을 기반으로 효를 전파하면서 일상에서 이행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중국에서 전개되는 현 상황처럼 권위주의 통치의 일환으로 도덕과 가치관 준수를 강제할 경우 국민들의 자발적, 자율적 호응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효, 효행을 놓고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명령의 간극을 좁히는 노력과 조치가 요구된다.

아동 양육 문제와 관련해서도 당과 정부의 일방적 입법 및 정책 추진 사례가 「가정교육촉진법」에서 발견된다. 2022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동 법의 입법 취지를 확인해보면 ‘아동교육에서 부모의 책임감을 높이고 공공시스템을 통해 양육과정의 어려움을 해결토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조문에는 공산당에서 대단히 중시하는 가치관, 지식, 건강, 심미관, 노동관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당정이 가정교육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⁵³⁾ 저출산의 장애물인 아동 양육 부담을 국가 차원에서 돕겠다는 국정홍보의 이면에 별도의 정치적 목적이 내재된 만큼 동 법 또한 국민 정서와는 괴리가 있다.

V. 결론

효행장려법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문화인 효, 효행의 가치와 의미를 지켜내려는 민간과 정부, 그리고 입법부 사이의 굳건한 약속이며 합의이다. 물론 동 법 내용 가운데 일부 미비점이 존재하고 용어와 개념의 경우 현재 상황과 다른 부분도 거론되는 만큼 보완 입법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민간 주도로 이미 15년 전 고령화 시대 문제를 해결키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추진, 탄생했다는 측면으로는 매우 큰 의의가 있고 한국효단체총연합회 등 효 관련 단체의 예지와 노력이 임혀진다.

우리사회에서 효, 효행이 중시되고 일상에 녹아들기 위해서는 권유자의 시각이 아닌 당사자의 입장이 중요하다. 이런 연유로 효행장려법이 우리사회의 현안으로 자리한 저출산 현상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출산장려와 연계되려면 적용대상인 청년세대의 인식과 행태가 어떤지 확인해야 한다. 즉 법률을 둘러싼 환경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되는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효행의 주체는 점차 줄어들고 대상은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효행 차원에서 본다면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가 초래되는 것이다.

52) 梶谷 懐·高口 康太, KOUFUKU NA KANSHIKOKKA CHUGOKU, 박상민 역, 『행복한 감시국가, 중국』 (서울: 놀와, 2021), 91.

53) 동 법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 「中華人民共和國家庭教育促進法」 원문본 참조

때문에 청년세대의 부담은 가중되면서 효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개연성이 높아진다. 이들은 취업난, 주택난, 양육난 등의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기존 질서와 기대에 반하는 행태를 보이게 된다. 결과적으로 효행장려법의 측면에서 판단 시 대단히 불리한 환경이 조성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정부가 2005년부터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투입,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이행 중이지만 출산을 하락이 지속되는 등 금전적 지원의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기존의 물질차원 조치 외에 혼인과 출산에 관련된 인식 전환 계도, 가치문제로의 접근 같은 새로운 방식의 병행을 검토해야 된다. 청년세대가 효와 효행에 대한 각성을 통해 혼인 및 출산 문제를 놓고 보다 전향적으로 사고, 행동하도록 유도키 위해서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효행장려법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시 범부처 차원 장관급 합의에 반영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의 모태로서 위상을 갖는다. 따라서 원래 취지인 고령사회 문제 뿐 아니라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든든한 배경이 될 수 있다. 아울러 효, 효행이 갖는 의미와 기능에 대한 해석자로서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이를 확고히 하려면 법에 효행이 사회적 가치 구현이며, 출산장려는 효행이 지행할 방향임을 명시해야 된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고등종교 공히 가족과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으나 근래 우리사회 일부에서 반출생주의가 언급되고 청소년층 간에 “남을 당했다.”는 식의 자조적 표현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이성적 설득이 필요한 시점에서 효와 효행을 출산장려 논의의 장에 등장시켜야 한다. 생명의 탄생이 예비되는 가정의 중요성까지 감안, 효행장려법 제1조 목적에 가정윤리이자 생명윤리인 효를 국가 차원에서 장려한다는 문구가 첨가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출산장려는 정부 외에도 시민단체의 참여와 활동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법에 규정된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효행단체 지원이 확실히 이행되는 것이 당연하다. 출산장려 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청년세대의 심리를 자극하고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노력이다. 이를 통해서 자신이 부모님에 의해 태어난 것을 감사히 여기는 ‘효 마음’을 갖고 스스로 위대한 존재임을 인식토록 할 필요가 있다. 후손이 없는 사회는 효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효 단체의 미래는 출산장려 운동에 집중되어야 한다.

한편, 인구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동병상련의 입장인 중국은 인구보너스에 힘입어 고도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나 개혁개방 초기부터 진행된 산아제한으로 인해 인구절벽을 고민하는 상황에 처했다. 결국 ‘세 자녀 허용’ 등 정책의 대전환을 결정하고 대규모 예산 투입, 다양한 지원책 시행 등 국가 차원의 출산장려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청년세대의 결혼과 출산 인식이 난제임은 확실하지만 인구 문제에 대한 국가지도자의 깊은 관심, 인구 및 가족계획법 개정, 사교육 전면 중지, 100개 아동친화도시 건설 시범사업 등 조치는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고 적극적인 자세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중국은 효 문화 진작을 위해 노인권익보장법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법에서 부모에

대한 금전적 지원 의무화 등 효를 강제하는 데 대한 반발이 청년세대 사이에 분명 존재한다. 또한 ‘사회신용시스템’으로 개인의 효도 여부까지 파악하려는 당정의 조치는 자율적 윤리를 제도로써 강권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되는 바, 우리로서는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학계는 한국의 민간 주도 효 운동과 관련 입법을 놓고 시기, 방식, 자율성에 대해 매우 높은 평가를 내린다. 이는 한·중 양국 간 효를 통한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효행장려법이 연구, 교육 및 단체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효 운동의 기반으로 자리한 가운데 이제 저출산 문제는 변수가 아닌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상수가 된 만큼 법률에 출산장려를 담는 작업이 긴요하다. 제정 15주년을 맞아 변화된 사회 인식과 환경을 반영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관련 규정의 수정 및 보완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는 효 단체의 향후 과제이자 정부와 입법부가 적극성을 발휘해야 될 영역인 바, 민관이 합심하고 법률에 따라 효 가치를 지켜내면서 효행을 이어가면 아이들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미래사회를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吉祥經』

『孟子』

『佛說尸迦羅六方禮經』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성경』

『詩經』

『中庸』

김종두, 『인성교육의 이해와 실제』, 서울: 명문당, 2018.

김종두, 『효패러다임의 현대적 해석』, 서울: 명문당, 2016.

문봉수, 『시진핑의 효도리더십』, 서울: 북랩, 2021.

박민희, 『중국 딜레마』, 서울: 한겨레출판, 2021.

전영수, 『대한민국 인구 트렌드 2022-2027』, 서울: 블랙피쉬, 2022.

전영수, 『한국이 소멸한다』, 서울: 비즈니스북스, 2018.

최성규, 『우리가 꿈꾸는 하모니세상』, 인천: 성산서원, 2017.

習近平, 習近平談治國理政 第二卷. 北京: 外文出版社, 2017.

David Benatar, BETTER NEVER TO HAVE BEEN: THE HARM OF COMING INTO EXISTENCE. 이한 역.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서울: 서광사, 2019.

梶谷 懐·高口 康太, KOUFUKU NA KANSHIKKOKA CHUGOKU. 박성민 역. 『행복한 감시국가, 중국』. 서울: 놀와, 2021.

김시우, “효를 통한 저출산 위기 극복 방안”, 『효행장려는 출산장려 FORUM』자료집 (효문화지원본부, 2022.5), 54.

김종두, “효는 출산장려정책의 철학적 기초다” 『효와 복지』 (한국효단체총연합회, www.hyounion.com/post/458?gid=3/5, 2022.5)

신석산, “효행장려는 출산장려”, 『효행장려는 출산장려 FORUM』자료집 (효문화지원본부, 2022.5), 17.

조남욱, “전통적 효와 현대적 효”, 『효학연구』제10호 (한국효학회, 2009.12), 100.

차종목, “저출산 불안안정화를 위한 효 심리 효과”, 『효행장려는 출산장려 FORUM』자료집 (효문화지원본부, 2022.5), 88-89.

蔡茂松, “효의 본질과 현대적 의의”, 『효사상과 미래사회』(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176.

최성규, “간행사”, 『효학연구』제4호 (한국효학회, 2007.8)

韓廣忠, “韓國社會孝道推廣運動及其立法實踐述評”, 『효학연구』제9호 (한국효학회, 2009.4), 32.

김민재, “380조 저출산 예산...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요? 노컷뉴스(2021.9.21)

김응식, “인구위기와 저출산 해법”, 뉴스워치(2021.12.17)

권현경, “저출산=출산파업, 파업을 끝내는 방법 뭘까?” 베이비뉴스(2018.1.16)

류지영, “중국도 백약이 무효...출생율 43년 만에 최저”, 서울신문(2022.1.5)

박현수, “저출산·고령화는 가장 큰 위협...이민 적극 개방해야”, 문화일보(2022.4.2)

신경진, “14억 중국의 저출산 대책...셋째 벌금 없애고 교육·주택 지원”, 중앙일보 (2021.7.21)

오수경, “인수위,尹정부 인구정책 전면 재구조화할 것”, 노컷뉴스(2022.5.1)

원다연, “더 빨라진 인구 자연감소...출산여건 조성·정년연장 논의 속도 내야”, 이데일리(2022.2.23)

이도형, “인구와 경제”, 경기일보(2022.3.14)

이은택, “교황...아이 안 낳는 세대, 인간성 악화시켜”, 동아일보(2022.1.7)

장영은, “중국 세자녀 출산 허용...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 이데일리(2021.8.22)

저출산고령화대책시민연대 공동포럼, “종교계저출산 문제 어떻게 보나”, 연합뉴스 (2006.2.21)

정소희, “솔로지옥에 열광한 N포세대”, 부산일보(2022.1.24)

정윤석, “저출산·초고령화 문제 종교가 푼다”, 기독교포털뉴스(2005.7.4)

최현숙, “출산파업을 확장하자”, 한겨레신문(2018.4.2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s://csf.kiep.go.kr>) “中 100개 아동친화도시 건설 시범사업 전개”(검색일 2022.5.10.)

법제처 세계법령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 “中華人民共和國家庭教育促進法” 원문본(검색일 2022.5.1.)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 “中華人民共和國老年人權益保障法” 원문본(검색일 2022.5.1.)

통계청(<https://kostat.go.kr>), “2020~2070 장래인구 추계”(검색일 2022.5.1)

“효행장려에 관한 법률과 출산장려의 연계 및 해결 방안”에 대한 논찬

논문발표자 : 문봉수(한·중 효문화연구소 소장)

토론자 : 김시우 교수(성산효대학원대학교)

I. 논문의 내용에 대한 정리와 질문

문봉수 박사께서 쓰신 좋은 논문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문봉수박사의 논문 “효행장려에 관한 법률과 출산장려의 연계 및 해결 방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2007년 7월 2일 국회에서 여야 반대표 없이 제정 통과 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효행장려법’으로 줄여 호칭)을 바르게 이해하고, 현재 한국의 국가적 당면 최대 과제인 출산장려 문제 와 연계하여 해결방안을 찾고자 선도적 심도 있는 연구를 하심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2. ‘효행장려법’은 효행을 통한 고령사회가 처한 문제해결 차원에서 민간 효 단체의 선도, 입법부의 공감에 의해 탄생한 법률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3. 다만 동법이 제정 후 15년의 시간이 경과한 만큼 사회 및 인식의 변화를 감안, 효 개념 재정립과 효행 교육 의무화 등 개정 혹은 보완입법이 요구된다.
4. 나아가 동 법은 국가 현안인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의 가치 기준이자 실천 기반으로 역할의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5. 청년세대의 결혼과 출산 기피가 심각한 가운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예산 투입도 중요하지만 당사자 심리를 자극하고 의지를 촉발키 위해서는 법에 규정된 교육 확대, 효 관련 민간단체 지원 기능 강화를 통한 시민운동 활성화가 요구된다.
6. 한편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과정과 유사한 중국의 정책 가운데 우수한 것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실패 또는 문제 사례는 타산지석으로 삼는 지혜를 발휘해야 될 것이다.

위와 같은 문봉수 박사의 견해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며, 향후 ‘효행장려법’ 개정 보완과 출산장려운동에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

요컨대, 문봉수 박사는 그의 논문에서 “효행장려에 관한 법률과 출산장려의 연계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한 바, 이 분야의 첫 논문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하고 싶다. 그리고 특히 효학박사인 저자가 생명철학으로서 효의 본질을 피력한 해박한 지식과 이를 출산장려와 연계한 깊은 연구로 더욱 돋보인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논문 제목에서 시사한 효행장려에 관한 법률과 출산장

려의 연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였으나, 구체적 해결 방안 제시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바, 1) 문봉수 박사의 출산장려를 위한 구체적인 법률적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2) 향후 '효행장려법'의 개정안의 성안 작업이나, 계속 연구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Ⅱ. 문봉수 박사의 논문에 대한 고찰 결과, 제언 및 건의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절벽시대를 맞아 추락하는 나라의 운명을 구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제대로 효행교육을 실시하고, 효행장려를 통한 출산장려를 강력히 실천하여야 한다.

이에 본 논찬 자는 이 논문의 목적인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적 기여도를 제고하고, '효행장려법의 개정/보완을 촉진하여 후속 연구자와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당국 및 효 관련 유관단체 등의 출산장려 정책수립과 운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아래에 몇 가지 동법 개정에 대한 제언과 효교육을 통한 출산장려에 대한 실증 참고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1. '효행장려법'에 출산장려 반영의 일부 개정 '국민제안' 건의

○ 취지와 제안 이유 :

향후 개정안에 대한 관련 기관과 학자들의 토론을 거쳐 성안하여 대통령실¹⁾, 국회와 행정부 등에 건의를 추진한다. 법치국가에서 효행장려를 통한 출산장려가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우선 '효행장려법'에 출산장려 관련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일부 개정과 혹은 관련 법률의 보완 등 법률적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좀 더 구체적인 '효행장려법'의 개정안이나 바른 내용의 문구를 아래와 같이 제안함으로, 본 포럼의 사회적 기대와 법률적 기여도를 높이고자 한다.

현행 '효행장려법'은 제4조(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③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 이미 효행 장려 및 지원 문제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결부시키고 있음은 다행하다. 따라서 제4조 ①항의 규정대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마다 효행장려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효행장려 및 효

1) '효행장려법'에 출산장려 반영의 일부 개정안을 성안하여,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제도인 '국민제안' 제도를 활용, 대통령실에 제출한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022년 6월 23일 "오늘 오후 3시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에 새로운 국민소통창구인 '국민제안' 코너가 공개된다"고 밝혔다. 국민제안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소통창구다.

문화 확산을 통한 출산장려운동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즉

현행 ‘효행장려법’ 제4조 :

-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기본계획은 효행장려를 위한 환경조성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음에, 이를 근거로 하여,

‘효행장려법’의 제1장 제1조 목적에 “저출산”을 삽입하여 “(저출산·)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로 개정하면, ‘효행장려법’의 목적에서 ‘출산장려’(저출산·고령사회 문제)가 포함되니, 이하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효관련 단체 내지 기관 등에서 출산장려와 연계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차제에 제2조 1항에 “효”의 정의를 현대사회에 맞게 효의 개념을 물질적인 양구체의 효를 넘어 정신적인 효, 양지의 효를 포괄하는 광의의 효로 정의하도록 한다. 그리고 광의의 “효문화”의 개념 속에 출산장려를 포함하기를 건의 한다. 이러한 제안은 그동안 학계와 포럼 등에서 연구 발표되어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여진다.

이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효행장려법’의 개정안을 ‘국민제안’ 한다.

2. ‘효행장려법’의 <개정안> * 개정 부부는 (괄호) 안에 표시됨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저출산·)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외에 세계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목적에 저출산 추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효”란 (세대 간 사랑과 공경을 통해 이해와 화합을 증진하고)²⁾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신규로 추가)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장려법과 관련하여 황주홍 의원은 2018년 5월, ‘지방자치단체의 효행교육 의무화’를 명시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고 이명수 의원은 2019년 9월, 효를 사랑과 공경의 양 방향적 의미로 새롭게 정리한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 (출산장려)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추가)

□ 제2장 효행장려

제4조(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신규로 추가)

②기본계획은 효행장려 및 출산장려를 위한 환경조성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대학교 추가)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교도소, 기업체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 2016.2.3] [[시행일 2016.8.4.]](기업체 추가)

□제8조(효문화진흥원의 업무)

효문화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2. 효문화 진흥에 관한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3. 효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활동
4. 효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평가와 지원
5.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과 연수
6.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지원
7. 효문화 진흥을 통한 저출산 극복 출산 장려 및 교육(신규 추가)
8.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업무

이상과 같이 ‘효행장려법’이 개정 보완되면, 효행장려를 통한 출산장려가 예상외로 빠르게 추진되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조기에 고출산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그 근거는 이미 일부 종교단체나 효 관련 기관에서 효 교육과 장려를 통한 출산 장려의 임상실험을 통해 출산율이 현저히 높아졌다는 실증자료가 있고, 이스라

엘의 정통파 유대인은 (쉐마)효도교육을 통해 고출산이 유지되고 있다는 학계연구와 임상 자료가 있으니 이를 벤치마킹 혹은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다,

3. 효관련 기관, 교회 등에서 출산장려 실증 사례 원용

- 1) 유대인의 쉐마(효도)교육을 통한 출산율 제고 사례 : 현용수 박사
- 2) 종교기관 교회 내 효 교육 출산장려 사례 :
 - 인천순복음교회 출산장려 효교육으로 출산율 배가(교회학교 1,000여명)
 - 출산율 0.84에서 3.5명으로 4년만에 급증한 동상제일교회 등

4. 출산장려 제언 및 대정부 건의

1) 정부 및 여성 가족부에 건의

출산과 관련 실효적인 정책을 입안 추진을 위해 부의 명칭을 ‘출산가족부’ 혹은 ‘가족부’ 등으로 변경 혹은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정부는 출산을 하면, 원하는 가정에게 특혜를 주는 방안 적극 건의³⁾.

- 1자녀 출산 : 임대아파트 10년 무상 임대
- 2자녀 출산 : 임대아파트 20년 무상 임대
- 3자녀 출산 : 임대아파트 30년 무상 임대
- 다둥이출산 : 임대아파트 평생 무상 임대

또한 그동안 정부에서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이 집행되었는데도, 출산율은 계속 하향하고 있는데, 이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효를 통한 가치관 교육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것은 효는 가족 간 사랑과 존중이고 후손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조)부모의 간절한 소원인데 효교육을 통한 가족 사랑과 출산장려 교육 건의 :

그 많은 예산중에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해서, 효행장려를 통한 출산장려 교육과 운동을 전국적으로 체계적으로 실시한다면, 생명사랑교육, 출산교육, 패륜예방교육, 자살예방교육, 생명경시강력범죄예방, 음주교통사고예방, 청소년 인성교육 등에 1석 10조의 이상의 효과를 볼 것이며, 이로 인해 범죄의 사회적 비용 수 천 억 원을 절감하여 효교육과 출산교육 비용에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2) 가정에 제언

가정 내 효의 본질인 사랑과 공경을 가족 상호 간에 실천하고 특히 아내와 여성들을 존중하여 출산과 결혼을 선호하도록 아껴주고 격려하며 도와주어야 한다.

출산은 여성만의 특권이지만, 부부의 책임이다. 양육은 온 가족의 책임이며, 더 나아가 사회의 책임이다(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동네가 나서야 한다). 출산은 가정의 행복이다. 출산은 국력이다. 출산을 하면 여자가 어머니가 된다. 여성은 어머니일 때 더 아름답고 강하다. 어머니는 가장 존경받는 호칭이며 위대한 직분이다. 인간은 생명 출

3)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설립자 겸 총장 최성규 : 국민일보, 경향신문 광고 2021.11.4.

산과 양육의 사명이 있다.

3) 기업체에 제언

한국의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과 현대 그룹의 창업주 회장들이 인간의 백행지본이 효를 높이 평가하고 효행상 제도를 수 십 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효의 생활화, 전국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하여 효행을 장려하고 미래의 기업의 인적 자원인 출산을 장려하는데 관심과 투자를 하여야 할 것이다. 효(HYO)는 중장기적으로 경제 활동과 행복의 에너지이다.

5) 효 단체, 기관, 종교단체에 제언 : 효교육과 효행장려를 통한 출산장려 교육과 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함께 저출산을 극복하여 국익과 민생경제, 인류행복에 기여하도록 한다.